

한전공대 입지 ‘장래확장성’ 최우선

한전, 국제용역 입찰공고...입지선정위 평가통해 결정
학교 발전 방향 등 분석·고려 적정 부지규모 제시해야

한국전력이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국제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과업 내용을 공개했다.

입지선정이나 부지규모에 있어 장래 확장성과 학교발전 방향을 최우선으로 뒤야 한다는 것이다.

한전은 15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한 ‘한전의 공과대학 설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제안 요청서에

서 이러한 과업 내용을 공개했다.

한전은 과업 내용에서 “국내외 대학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지역(광주·전남)의 자연, 인문, 사회, 교육 등 입지 환경을 분석해 장래확장성 및 학교발전 방향을 고려한 적정 부지규모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지별 기본 및 일반 현황 조사(장·단점 분석) ▲개발방식, 개발여

건, 문제점, 잠재력 등 종합적 평가 ▲후보지별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 종합 검토 ▲광주·전남지역 내 입지분석 및 후보지 제안 등을 제시했다.

한전은 또한 ▲국내외 입지선정 추진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주변 환경, 대학운영 방안 등을 고려한 최적 입지 조건 도출 ▲세부 평가 기준 항목 분석 및 중요도에 따른 항목별 가중치 등 입지선정 평가 기준을 제시해 줄 것을 용역업체에 요구했다.

과업 내용에 따라 용역업체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별 종합 평

가를 통한 최종 입지를 선정한다.

한전공대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 입찰은 국내외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입찰 참가 신청이 내달 22일까지여서 오는 3월 용역에 착수하면 8월께 용역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용역 입찰 비용(추정가격)은 43억8천 200만원(부가가치세·사급자재비 포함)이다. 한전과 자치단체 안팎에서는 한전공대 설립 비용을 5천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다. 부지는 150만㎡ 규모로 2022년 3월 개교 목표로 설립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범 기자 coolguy@kjdaily.com

광주고검 차장에 이석환 청주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오인서

법무부는 이석환(54·21기·사진) 청주지검장을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전보하고 대검찰청 공안부장에게 오인서(52·23기)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전보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19일자로 단행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 출신인 이 광주고검 차장은 송일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21기로 검찰에 입문했다. 이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오는 6월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범죄 수사 관리를 책임질 대검 공안부장에는 오인서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보임됐다. 오 부장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등을 거친 ‘공안통’으로 선거 관리 경력이 풍부하다.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는 직무대행 체제 해소와 검사장급 보직 축소에 따른 전보 인사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별도의 검사장급 승진 인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오송지 기자 ohssj@kjdaily.com

지역위 소통특위, 호남위원 위촉식 민형배·주철현·이무현 등 6명 포함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지역위)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위원회 산하 ‘국민소통 및 지역협력 특별위원회’(이하 소통특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지역위는 지난해 11월 지역위 1차 본회의에서 소통특위 설치를 의결했으며, 12월 소통특위 위원장에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을 우선 위촉한 바 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이두영 소통특위 부위원장을 비롯, 민형배 호남위원장(광주 광산구청장)과 주철현 여수시장, 이

무현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등 호남지역 위원 6명, 김대일 거버넌스 위원장(성북문화재단 대표), 변창흠 수도권위원장(세종대 교수), 강현수 중부권위원장(충남연구원장), 손은일 영남위원장(국제대 교수) 등이 위촉장을 받았다.

위원회 관계자는 “소통특위를 통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균형적으로 지역 정책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강원, 제주 등 여타 지역은 위원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jskim@kjdaily.com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의견 조율 후 결정”

정부 ‘가상통화 입장’ 발표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법무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

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정 실장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1면 ‘사육제한’서 계속

또한 도는 AI 토착화 우려에 대비해 위험지역 축사 이전, 축종 변경 등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도는 ▲최근 3년 이내 야생조류 등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9개 시·군, 38개 읍·면·동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7개 시·군, 17개 읍·면·동 ▲축산농가 수가 반경 500m 이내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 20호 이상인 1개면 등 11개 시·군, 49개 읍·면·동(일부 중복)을 중점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했다.

해당 지구 내 가금농가가 축사를 이전하면 비용을 지원한다. 가금농가들이 법인을 구성해 축산 단지화를 추진하거나 가금류 외 다른 축종으로 변경해 사육할 때도 축사 신축,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휴지기제는 지난해 연말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도입돼 충북 등 몇몇 지자체는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AI 발생으로 인해 영암, 나주 등 전남지역의 피해가 커지면서 이 제도로 고강도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다른 대책도 병행 추진해 피해 최소화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면 ‘밀어붙이기’서 계속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의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규개정 시도를 철저히 봉쇄하겠다”고 천명했다.

당시 반대파는 이날 김경진 의원의 주재로 창당기획단 첫 실무회의를 여는 등 ‘개혁신당’ 창당을 공식화하면서 압박을 이어갔다.

이들은 17일 전주교대에서 ‘개혁신당’ 창당 전복결의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남도, 인도서 수출상담회 경제협력 방안 협의차 인도를 방문중인 우기종 전남도 정부부지사가 15일 콜카타에서 참석자들과 수출상담회를 갖고 있다. /전남도 제공

‘한국 남도여행 상품’ 日서 인기몰이

지역 주요도시·향토요리 체험 호평

전남도는 15일 “광주시, 한국관광공사 후쿠오카지사(지사장 임용목)와 공동으로 ‘2018 전라도 방문의 해’를 기념해 기획한 방한 상품이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화제가 된 여행상품은 ‘처음가는 한국 남도여행 상품’이다. 일본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순천, 담양, 광주, 목포, 영암, 나주, 여수 등 전라도 주요 도시를 방문하며 담양떡갈비, 남도한정식, 대동밥, 불낙 등 향토요리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2018 전라도 방문의 해” 기념으로 일본 내 전남·광주지역 상품화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기획한 상품으로 큰 반응을 얻어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총 150여 명이 이용했다.

북한 미사일 정국 및 한일관계 냉각으로 침체한 최근 일본인 방한관광 시장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이 현지지의 반응이다.

전남도와 한국관광공사는 남도 여행 상품 판매에 맞춰 지역 유력 방송사인 ‘RKB 마이니치방송’에 전남 관광 특집 프로그램을 기획, 방영해 전남·광주 지역에 대한 관심과 여행심리를 고조시켰으며, 당초 올 1월까지 설정된 여행상품 판매 기간도 3월까지 연장한 상태다.

여행상품에 참가한 일본인 관광객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 부산과는 다른 한국다운 전원풍경이 인상적이다’, ‘식사가 매우 훌륭하다’, ‘좀처럼 보기 힘든 남도투어다’ 등 호평이 줄을 이어 ‘전라도 방문의 해’를 계기로 일본인 관광객 유치 확대 가능성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방옥길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그동안 시장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에 주력해온 것이 주효했다”며 “전남만이 가진 매력에 일본인 관광객에게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와 협력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임야

바로 삽니다. 010-6838-1230

돈 늘분 대출

(주)오전경매대부 대표 최대성, 등록번호 2016-금감원 0622, 법정이자율 : 연 27.9%(월 2.3%) 이내, 추가비용 없음, 조기상환조건 없음,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등록시도명칭 : 광주광역시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 2001호 상담문의. 010-3605-5000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저(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임대

▪판매

▪A/S

T.375-5880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이주여성이 낯선 땅에서 가정폭력과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 8개 국어(베트남어, 필리핀어, 중국어,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프랑스어)로 상담해드리는 **이주여성전문상담기관입니다.**

상담시간 : 오전9시~오후6시

☎ 062)366-1366, 367-1577, 368-1577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1577-1366

Emergency Support Center for Migrant Women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광주센터

‘맞벌이 다자녀가정’ 손자녀돌보미 신청하세요!!

◆ 신청자격

1. 손자녀 (8세 이하)를 임시로 돌보는 (외)조부모

2. 맞벌이 가정으로 자녀가 쌍둥이, 세자녀 이상 세대

3. 손자녀의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며, 아동과 아동 부모 중 1명은 아동과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소득기준은 가구 소득 평균 100% 이하인 세대

◆ 간단한 신청방법

— 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 전화:363-9401~2 · 팩스 : 363-9403 · 이메일: cow9401@hanmail.net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 서약서(Daum카페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게시판 참조)

2. 건강보험카드 사본 (부부 각각 제출)

3. 주민등록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4. 소득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최근3개월)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명세서(최근 3개월),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자영업자의 경우)

◆문의처 (사) 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24 여성단체회관 3층 (농성동)

전화: 062)363-9401~2

CMYK